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임대보증채권 매입 이견 여전

국회 국토위, 3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심사 여 "채권매입 안돼" 야 "반환 상응방안 찾아야"

여야는 3일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지만,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보증 채권 매입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2시간30분가량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사기당한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사적인 사기 이외에 정부

정책 실패로 사기에 준하는 보이스피싱 등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인 간 계약에 국가가 뛰어들어 손해 본 모든 케이스에 일정 부분을 보상한다는 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대신 공공이 주택 경·공매를 대리하는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가지고 왔다. 이와 함께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매입주택' 명목으로 매입한 뒤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를 하는 기존 수정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LH 우선매수권에 대해 "일부가 피해주택에서 살기 싫다면 다른 지역에 마련

된 매입임대 주택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며 "100% 만족스러운 집은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 주거권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비나 복지지원비 등이 지원되는 한편, 선순위채권자가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만큼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역마다 현황이 파악된 건 아니지만 인천 미추홀구는 70.9% 수준이 2900여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는 자료가 있다"며 "나머지 30%도 일단 LH 임대주택에 의해 주거권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우선매수권과 LH의 임대 등 두 가지 방안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채권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방

안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다"며 "오후 2시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줘 한 푼도 못받는 경우 8500만원으로 간주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야당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내놨다.

허중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강동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미추홀구 사례,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 그런 부분까지 논의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민주, 분신 노동자 사망에 尹 맹공... "대통령에게 원천 책임"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동절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치료 중 사망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한 데 대해 한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참혹한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가림하려는 알뜰한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주 69시간제 같은 노동계약도 전

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에 강력히 맞서겠다"며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끝내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강원노조지부장이 분실했다"며 "부인은 마트 노동자고, 딸은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아내와 딸을 놓고 분신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윤 정부의 수사기관은 그분을 향해 업무방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쫓았다"며 "내가 집시법도 아니고 업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분실했다"고 말했다.

또 "그날 똑같이 (영장이) 발부된 2분은 모두 기각됐다"며 "과도한 수사기관들의 수사 때문인데 윤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만찬 장소에서 만찬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렇게 비정하고 무서울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광주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지난 1일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운영에 관한 우수사례 공유와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지방자치 2.0시대, 선도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맞이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나아가 진정한 자주권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의회 운영 펼치고 있는 광주 북구의회를 선진지로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정달성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운영위원들은 인사권 독립 전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에 대비하고, 독립 후 '제도개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시스템을 확립한 과정과, 이후 '제도혁신팀'을 신설하여 제도 개선

과 의회 발전방안 마련하고 과제를 실행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내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법령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분권 2.0 특별위원회' 활동과 광주 5개 자치구의회간 인사교류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한 사례도 공유하였다.

양 의회 의원들은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회 발전방안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 의회운영위원회간 상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